

제16차 한국-미국서부 전략포럼

2016. 6. 28



포럼 개요

■ 일 시: 2016년 6월 28일 (화) 09:00-18:00

■ 장 소: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아태연구소 (APARC)

■ 회의일정:

개회식	환영사	· 신기욱 아태연구소 소장 · 박준우 세종연구소 이사장
제1세션	동북아 정세	· 사회: T.J. Pempel · 발표: 김흥규 교수 Tom Fingar
오찬	오찬사	· William J. Perry
제2세션	북한문제	· 사회: Michael Armacost · 발표: 백학순 본부장 Dan Sneider
휴식	<i>Break</i>	
제3세션	한미동맹	· 사회: 김성한 교수 · 발표: 김성한 교수 Kathy Stephens
종합토론	Wrap-up and Conclusion	
만찬	만찬사	·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 포럼 참가자

○ 한국 참가자 (가나다순)

1.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3.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
4. 박준우, 세종연구소 이사장, 전 청와대 정무수석
5. 박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6. 백학순, 세종연구소 교육연수본부장
7.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전 외교부 장관
8. 이성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9. 이지은, 세종연구소 연구원
10. 조남훈,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미국 참석자 (abc순)

1. Michael H. ARMACOST

Distinguished Fellow, Shorenstein APARC, Stanford University

2. Thomas FINGAR

Distinguished Fellow, Freeman Spogli Institute, Stanford University

3. Joyce LEE

Research Professional, Korea Program, APARC, Stanford University

4. T.J. PEMPEL

Professor,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5. William PERRY

Director of the Preventive Defense Project at CISAC, FSI Senior Fellow, CISAC Faculty Member

6. Gi-Wook SHIN

Director, Shorenstein APARC, Stanford University

7. Daniel C. SNEIDER

Associate Director for Research, APARC, Stanford University

8. Kathleen STEPHENS

Distinguished Fellow, APARC, Stanford University

9. David STRAUB

Associate Director, Korea Program, APARC, Stanford University

포럼 내용 요약

동북아 정세

■ 북한은 핵과 미사일 성능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음. 북중관계는 침체기를 겪었고 중국은 북한 제4차 핵실험 이후 유엔 대북제재에 동의하였으나 리수용의 방중으로 북중관계가 최근 화해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들이 감지됨.

■ 동아시아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미중관계는 협력과 경쟁이라는 복합적 관계에서 최근 경쟁구도가 더욱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 동북아 역내 질서의 가장 큰 변수인 중국의 부상이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현상유지 (status quo) 국가로 인지 아니면 중국판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변경을 시도하는 (revisionist) 국가로 인지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불식되지 않은 바, 이는 전문가들 사이에 중국의 실체와 전략적 의도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혼재하고 있음을 반영함.

■ 미국의 세력 우위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신고립주의·미국우선주의 경향을 보이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기대 외의 선전 등 미국 국내 정치 불확실성의 증가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투사되어 새로운 지정학적 변수로 등장할 수 있고, 양국이 이러한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함.

■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재균형, 남중국해에서 군사억제력 강화, 한미일 동맹 강화 등으로 동아시아지역에 미국의 존재감을 높였지만 역내 국가들은 충분히 안심하지 않고 불안감을 표시하는 등 서로간 기대의 편차가 존재함. 미중갈등이 증폭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국가들이 미국에 더욱 안보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칫 미중 충돌을 조장하는 분위기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신중한 태도를 취함.

■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선포한 핵심이익 (공산당 통치체제 유지, 영토·주권 수호, 지속적 경제·사회 발전)이 최근 들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음. 중국은 2010년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이익 범위에 포함시켰고, 계속하여 이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바, 중국은 핵심이익에 있어 양보와 타협이 없음을 강경히 시사 함에 따라 충돌적 요소가 증가하고 있음.

■ 동아시아의 안보·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대화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를 비롯한 신뢰구축 채널의 유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함.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가교역할을 한다면 이는 미국·일본·한국·중국의 정책 네트워크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

북한 문제

■ 역대 최강 (toughest ever)이라 회자되는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 쌀, 석유, 그리고 환율에서 큰 변동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경제적 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서 효과적인 접근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맞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분석에 들어가야 함. 경제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중국의 선연적 참여 이상의 의지적 행동이 필요함.

■ 유엔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음. 이런 점에서 유엔제재는 북한으로 향하는 물품과 화폐 유통 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함. 또한 무력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제제재를 가용한 외교적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제재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북한을 외교적 수단이 가능한 상태로 돌리기 위한 과정임.

■ 북한은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6월 무수단 미사일 실험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는바, 북한의 미사일 성능 향상은 2017년이면 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추정됨. 이 시점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비관론이 제기됨. 미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옴. 외교적 방법이 실패했고, 군사적 옵션이 불가능한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임.

■ 현 상태에서 지그프리드 헤커 (Sigfried Hecker) 박사가 북핵 해결을 위해 제안한 세 가지 방안 (no more bombs, no better bombs, no exports)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동북아 비핵화지대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s Free Zone (NEA-NWFZ))의 아이디어도 실행이 쉽지 않음. 유엔 대북 제재의 성과도 여러 면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음. 결국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좋은 대안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 북핵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강온 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나 미국의 정치 상황도 북한과 여하한 협상을 고려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임하는 것이 미국이 북한에 양보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우려함. 이것은 미국이 이란과 맺은 협상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임.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에 한미 전문가들의 견해가 모아짐. 이런 상황에서 한미 사이에 대북정책 옵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짐. 북한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기술의 발달로 미국의 대북한 미사일 발사시설에 대한 방어 차원의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대두됨.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인 바, 이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P5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임.

한미 동맹

■ 한미동맹은 아주 양호 (in good shape)하며, 이전에 비해 성숙하여 국민여론의 갑작스런 변화 등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굳건한 상태임. 한미동맹은 북한 문제를 넘어서 기후변화, 경제성장 정책, 의료, 우주 협력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협력은 한미 동맹에 있어 그 폭·깊이·탄력 (breadth, depth, and resilience)을 강화하는 추동력을 제공함.

■ 오바마의 남은 임기 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인 바, 북한에 대한 강경입장은 지속될 것임.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한미 간 대북정책에 대한 엇박자로 한미관계가 훼손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미국이 인식하고 있음.

■ 동맹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 미국은 2016년 말, 한국은 2017년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함. 그런 와중에서 대북정책, 중국·일본·남중국해 문제 등에 있어서 한미공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한국은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공약 (commitment)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국내 문제해결에 사로잡혀 아태지역에서 안보적 빈틈 (security vacancy)이 생기게 될 경우를 우려하는 것이라 설명함. 미국이 일본을 아태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이용하거나,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 한국을 ‘아랫사람’ (junior)로 보고 대하는 것을 우려함. 한미 양국은 동맹의 목표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그 목표가 주한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지, 북한을 견

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 견제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priority)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 민감한 문제를 중국 등 유관당사자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한미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조율이 필요함.

■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지력 (extended deterrence)에 다소 안심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한반도 방어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군사력 강화 노력이 필요함. 한미일 안보협력의 실효성을 증대하고 한중일 대화와 협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주요 토론 내용

제1세션: 동북아 정세

(1) 세계질서와 동북아 정세

○ 핵문제에 있어 북한은 여전히 비협조적이고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음. 중국은 여전히 국제정치적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이 동아시아·남중국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는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높였지만, 역내 국가들은 그것에 대해 충분히 안심하지 않고 있음. 안보와 관련한 문제들이 최근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었지만 역내 국가들의 국내정치와 표심을 의식한 정치가들의 행동이 현 정국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됨.

○ 동아시아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미중관계는 협력과 경쟁이라는 복합적 관계에서 최근 경쟁 구도가 더욱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전환됨.

- 중국이 시도하는 세력전이에 맞서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Asia rebalancing) 정책을 취하고 있음. 근년 들어 중국은 국내적으로는 잠재성장이 느려지고 사회 불안이 가중되며, 국외적으로는 핵심이익 (core interest) 지역을 확대 하는 바,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주권을 강조하여 역내 국가 및 미국과 긴장관계가 형성됨.

○ 브렉시트 (Brexit)에서 보듯이 민주주의의 상징인 투표가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데 항상 유용한지에 대한 회의가 대두됨.

- 유럽에서 발생한 브렉시트는 동아시아에도 연동효과를 일으켜 국제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바, 브렉시트는 정치지도자들이 공공정책에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가를 시사 함.

○ 한국 측 전문가는 미국 역시 ‘미국 우선 (America First)’이라는 슬로건으로 상징되는 신고립주의 경향이 대두됨을 지적하고, 그것은 한반도에 있어 오바마 미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에도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고 의견을 제시함.

○ 미국 측 인사는 북한의 제7차 당대회의 결과가 외부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았다고 평가함. 김정은이 새 인물들을 포진시킨 것 이외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음. 또한 예상과는 달리 경제·민생 개선 방면에 관련하여 언급이 거의 없었음.

○ 북중관계는 침체기를 겪었고,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음. 중국은 북한 제4차 핵 실험 후 유엔 대북제재에 동의하였음. 허나, 최근 북중관계가 화해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으며 리수용의 방중이 그 대표적인 예임.

○ 한국 측 참가자는 사드 (THAAD)의 우선 목적은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이며, 중국견제는 그 다음 우선순위라고 함. 중국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미·중간의 전략적 갈등의 시각에서 관주하는 바, THAAD의 군사적 효과와 그 범위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을 설득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사드의 효과성에 대해 참가자들 사이의 이견이 분분하였음. 한 전문가는 사드 시스템이 북한미사일에 대응하는 충분한 효과가 충분한 자료로 입증되었다면 한국내 여론이 분열될 이유가 없고 이러한 군사적 효과가 정당화 되었다면 중국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 지적한 데에 반해 다른 전문가는 불과 일 년전까지만 해도 사드의 효과성에 대해 비관적이었던 한국정부도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거리 탄도탄이 500-100km 상공에 상승하여 300-400km 떨어진 지점에 낙하했다는 북한의 발표이후 현존하는 Pac-3 이외의 추가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으로 분석함.

※실험에서 사드는 비행기에서 낙하된 목표물을 적중시켰지만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시킨 실험 자료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음.

○ 북한문제, 대만문제, 남중국해 문제는 당사국들에게는 개별 사안일지 몰라도 미중관계의 큰 틀에서 볼 때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linkage politics), 미중간 역학 관계의 변화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 있음.

- 북한문제가 미·중간의 중요 대화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참가 인사 모두가 동의함.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이 공유될 때 전략수립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북한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음.

- 한국 측 전문가는 북한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늘 미국을 협상 상대로 보고 있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줄 수 (can meet North Korea's demands)'있는 나라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2) 미국 국내 정치

○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경선에서 보듯이 미국 정치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동시에, 미국의 무역 분야에서도 불확실성이 증가함.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불확실성을 깊게 느껴본 적이 없음.” (미국 측 인사)

- 미국의 신고립주의는 그 시대 사조적 뿌리가 부시 대통령 (George W. Bush) 이라크 전쟁에서 기인하였는바, 미국의 해외 파병 전쟁에 대해 잘못된 전쟁이란 국내외적 비판과,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침체, 세계화 문제가 대두된바 미국은 '안(內)'을 응시하는 경향이 강화됨.

- 미국 측 인사는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함. 미국은 주요한 세계적 차원의 일에 항상 깊숙이 관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임.

- 한국 측 인사는 트럼프의 태도는 한국에게 '핵을 가질 테면 가져라'하는 태도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고 함. 트럼프 발언의 행간을 살피면 미국이 고립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심지어 동아시아를 방기 (abandon)하겠다는 뉘앙스로 들림.

- 미국 측 인사의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의 동맹들에 대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많은 발언을 함. 그럼에도 그의 발언은 일부 미국 유권자들의 생각과 부합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표출함.

사건임을 전제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바이지만, 이런 발언들은 미국이 과연 아시아 리밸런싱을 할 의지와 능력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함.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TPP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국민들에게 설득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미국 측 참석자가 지적함. TPP는 그것이 미국에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미국인들에게 설명했어야 함.

- TPP는 경제 규율적인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나 실상은 전략적 균형정책이고, 중국에 대항하는 함의가 있음.

○ 한국 측 전문가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위태로워지는 양상의 하나로 TPP의 집행이 중단될 수 있는 바, 이는 미국의 신고립주의에 따라 미국 외교가 아시아 리밸런싱을 중지하고 환대서양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대두됨

- TPP는 미국이 중요한 주축이 되는 경제 공동체제를 이용한 정치·안보 협력 체계이므로 미국이 탈퇴하게 될 경우 그 체계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중국은 이를 좋은 기회로 이용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미국의 TPP 탈퇴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3) 미중 관계

○ 미국 측 인사는 역내 불확실성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내부 상황과 이에 대해 중국이 외연적으로 표출하는 행동이 추동요소라고 지적함. 중국 지도자들과 갈수록 증가하는 중국의 중산층은 중국 경제성장 하락과 중국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회의에서 오는 도전에 직면해 있음.

-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갈수록 커져가는 인민들의 불만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 공기 오염, 식수 문제, 불량 식품, 비싼 사교육과 의료 치료에 드는 막대한 비용 등 국가 시스템에 대해 국민들이 거는 높은 기대를 공산당이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시진핑 정부는 정치사상·학습 강화, 언론통제 강화 등 마오쩌둥 시대에 사용하였던 이데올로기 선전 수단을 동원함.

○ 중국의 외교정책 발현이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의 현상유지(status quo)국가로 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 변경을 시도하는 (revisionist) 국가인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함. 이는 중국 부상의 실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엇갈린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함.

-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세계질서에서 이득을 본 국가이기에 앞으로 미국의 헤게모니를 인정해주는 ‘현상유지 국가’로 남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중국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기회를 포착하면 언제든지 현상을 변경하고자 할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제시됨. 또한 미·중간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견해와 이는 과대해석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참석자들 간의 의견차가 발생함.

- 미국 측 인사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지속될 이유로, 중국과 달리 미국은 광범위한 동맹국과의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고 근년에 들어 그것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함. 현재 미중관계는 1930년대와 유사하며, 당시 일본은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고 있다고 오판하였음.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에 대해 중국이 역시 오판하고 있다고 봄.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비쳐지는가의 문제도 유의미하겠지만,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고 있다는 과대해석은 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함.

- 한국 측 참가자는 미국의 대외정책 책임과 약속에 있어서 미국이 동맹국과 좀 더 대등한 관계 설정이 요망된다고 지적함. 본격적인 미중간 세력전이가 발생하기 전에 미국 동맹국들의 이탈 (defection)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미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바, 이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미중관계에서 북한을 두고 걸으로는 양 강대국이 서로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이면에 이를 지정학적으로 이용하려는 내면적이고 실질적인 갈등 현상이 근년에 두드러짐.

- 미국 측 참가자는 중국 내에 북한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그룹들이 존재하나, 중국의 대북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토로함. “상당수 중국 측 인사들 본인들도 그 내막을 모르고 있음.” 다른 한 참가자는

이것이 중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함일 것이라 추측함.

- 한국 측 전문가는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이 중국식 먼로주의이며 역사적으로 중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패권의식과 종주국 의식형태를 반영하며 이전에도 행동으로 투사되었다고 설명함.

- 예컨대 중국은 임진왜란 중 일본에 대항하여 '항왜원조'(康倭援朝)를, 한국전쟁 중 미국에 대항해서 '항미원조'(抗美援朝)를 수행하였음. 이는 역사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자신의 지정학적 영향권 안에 두고 포기·방기·양보 한 적이 없음을 시사함.

○ 미국은 중국에 대해 견제정책과 균형정책을 병행하고 있음 (congame = containment + engagement). 더불어 미국은 동맹, 협력국가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이 선포한 핵심이익 (공산당 통치체제 유지, 영토·주권 수호, 지속적 경제·사회 발전)이 최근 들어 다시 주목을 받음. 이는 남중국해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이 있음. 중국은 2010년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이익 범위에 포함시켰음. 우려되는 것은 핵심이익에 있어서는 중국이 양보와 타협이 없음을 강경히 시사한 것임.

- 한반도가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하나인지, 핵심이익과는 다른 전략적 중요분야 중 하나일 뿐인지에 대한 참석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함. 한국 측 인사는 핵심이익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정부의 융통성(flexibility)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함.

(4) 한일 관계

○ 한미일 협력에는 공동이해가 있고, 실질적 진전이 있으며, 필요성과 함께 그 한계도 있음을 인식해야 함. 韓日간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은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과 일본은 필수적인 정보만 공유함.

-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GSOMIA의 핵심상대는 중국이 아닌 북한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 한미일간 긴밀한 협력은 북한을 넘어선 중국 견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엇갈린 주장도 제기됨.

- 한국 측 참가자는 GSOMIA에 있어 한국내 대국민홍보를 더 효과적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적지 않은 국민들이 GSOMIA를 한국이 알고 있는 군사정보를 일본에게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

- 한일간 경제협력과 필요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나, 안보분야의 협력에 한계가 있음. 한국의 국민여론은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 영토 내에 들어오는데 있어 부정적 입장임.

- 한국 측 전문가는 일본의 한반도 정책에는 모호성이 존재하고, GSOMIA와 ACSA (물품노역상호제공협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부재하므로, 아베 총리가 공개적으로 한반도의 통일 지지를 선언하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에 한미 전문가들의 견해가 모아지는 바, 이런 상황에서 한미 사이에 대북정책 옵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의 발달로 미국의 대북한 미사일 발사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대두됨.

○ 한국 측 인사는 한일 양국이 더 이상 위안부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한국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설립 준비를 시작한 것을 큰 성과라고 평가함.

제2세션: 북한 문제

(1) 前 미국정부 고위 인사의 오찬사 요지

○ 북한은 동북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라고 생각함. 문제는 우리에게 북핵 문제에 대해 외교적 해법 (diplomatic solution)이 남아 있느냐 하는 것.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친 '잃어버린 기회 (missed opportunities)'를 지적하고자 함.

○ 미국은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를 놓쳤음. 첫 번째는 1999년 페리프로세스 (Perry Process) 때. 당시 북한은 미국의 제안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었으나 미국의 대통령이 교체되면서 기회가 소멸됨. 두 번째는 2008년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 무대 위에 미국 국기가 전시되었고 북미 관계 돌파의 가능성을 보았음. 그러나 미국은 협상을 할 만한 고위급 인사를 보내지 않았고, 곧 제재를 시작했으며, 이에 북한은 화를 내고 협상의 빗장을 닫았음. 셋째는 2010년 지그프리트 헤커 (Siegfried Hecker) 박사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참관 때 었음. 미국은 헤커박사의 제안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함.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그의 제안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

○ 다시 북핵문제 해결의 기회가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북한의 목표가 무엇인가와 관련이 있는 바, 북한의 목표는 첫째는 체제의 생존, 둘째는 북한 정권은 역사적 운명이라는 신화 (myth)의 보호, 셋째는 국제사회의 존중을 얻는 것임.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제7차 북한로동당 대회에서도 보듯이, 북한은 병진노선을 통해 핵무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북한은 핵폭탄 숫자를 파키스탄, 영국, 프랑스 수준으로 올리려고 할 것임.

○ 북한의 핵을 파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음. 외교는 실패했고, 군사적 옵션은 불가능한바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임.

북한의 미사일성능 향상은 2017년이면 ICBM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 추정됨.

○ 미국의 핵방어시스템은 북한의 핵사용을 제지할 충분한 역량이 있으며,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음. 미국이 핵방어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 국민들을 더욱 안심시키기 위한 의미이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 (further deter)하기 위한 목적은 아님.

○ 북한도 자신들이 핵을 사용했을 경우 어떤 결과에 맞닥뜨리게 될지 잘 알고 있으므로 핵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봄. 우려되는 상황은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미국과 남한이 군사적 반응을 하게 되고, 북한이 재래전에서 밀리게 될 경우 군사적 위협 고조에 따른 정권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최후 방편으로 핵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임.

○ 현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공격적인 (offensive) 군사전략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지만, 방어적인 (defensive) 군사전략은 작동할 수 있음. 사드 (THAAD), L-SAM 등 방어체제는 가능할 것임. 둘째, 외교의 경우 회담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중요함. 지금은 헤커 박사가 제안한 세가지 No 방안 (no more bombs, no better bombs, no exports)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 동북아 비핵화지대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s Free Zone (NEA-NWFZ))의 아이디어도 있으나 실행이 쉽지 않음. 결국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좋은 대안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 어떠한 형태의 대화국면 (engagement)으로 접어들게 되던 이는 남북미 간 3자체제여야하며, 이는 미국과 북한간의 어떠한 관여 (engagement)도 한국과 함께 풀어나간다는 의미임. 한국의 안전에 꼭 필요하다면 한국에 핵무기 배치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임 (한국이 스스로 핵을 가져야 한다는 판단에 돌입하게 되면 그것은 일본까지 끌어들여지게 될 것이고 결국 전 지역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 중국이 북핵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때가 있었음.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목표가 북핵문제 해결이 아니라 북한정권의 붕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정권 붕괴가 가져올 역내 불안정과 통일된 한반도에서 주한 미군의 주둔에 대한 염려 등 전략적 불신이 장벽이 됨.

(2) 대북 제재의 효과성 문제

○ 미국 측 참가자는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조만간 혹은 중기적으로 재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봄. 북한은 핵보유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표명했고, 핵무기를 한반도 역외지역으로 멀리 운반하는 수단을 계속해서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천명함. 심지어 2.13 합의 (2007년) 같은 시한적인 핵동결 협상도 현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고려 방안이 될 수 없음.

- 미국의 정치 상황도 북한과 협상을 고려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북한과의 협상은 마치 미국이 북한에 양보하는 것처럼 비춰져 미국이 이란과 맺은 협상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임.

○ 미국 측 전문가가 강조하길, 확실한 것은 미국은 앞으로도 절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미국이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나라는 유엔안보리 5개국뿐 (P5).

○ 한국 측 인사는 현재 유엔안보리 제재나 개별국가들의 제재가 그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2270호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일컬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쌀, 석유, 환율이 비교적 안정화되어 있는 등 그 효과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함.

- 위에 대해 다른 전문가는 북한이 경제제재를 대비해 식량과 물품들을 사전에 비축해두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아직까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추측하며, 이 방법이 단기적으로는 북한경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축적해둔 물품들이 소진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함.

-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 미재무부의 북한에 대한 주요 돈세탁 우려국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지정 등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시키기 위한 압력 수단의 차원을 넘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이고 확실한 수단으로서의 북한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의

구심을 제기하게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이 경우,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상호 대결이 심화됨으로써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개진됨.

-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제재의 목표가 북한정권의 붕괴인지는 몰라도 강력한 대북제재가 북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였음.

○ 여러 참가자들이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2270호는 빠져나갈 수 있는 틈새 (loophole)가 많음을 지적하였음. 특히 중국에 소재하여 활동하고 있는 북한 국가 소유의 무역회사들에 대한 중국측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재와 관련하여 중국 지방정부들의 협력이 없는 한 효과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 이에 대해 다른 참가자는 제재결의안 2270호가 대북 제재로는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일지 몰라도 과거 對이란 제재안들과 비교할 때는 훨씬 약한 제재라고 설명하며 대북제재에 있어 수많은 틈새들이 채워지지 않는 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여기에는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이에 대해 미중양국이 미중관계의 틀 안에서 외교적 협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함.

○ 희망사항(wishful thinking)에 기반한 정책에서 벗어나, 현실(reality)에 기반한 주장과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여러 참가자들의 의견이 모아짐.

- 군사적, 외교적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제재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의견에는 참가자들 사이에 이견이 보임.

○ 미국 측 전문가는 우리는 그동안 대북제재에서 모 아니면 도 (all or nothing) 접근방법을 취해 왔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제재는 외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 (diplomatic toolbox) 중의 하나일 뿐이며, 즉, 무력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제재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북한을 외교적 수단이 가능한 상태로 돌리기 위한 과정임을 명심해야한다고 지적함.

- 이에 대해 한국 측 전문가도 장기적으로는 대북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지만 문제는 정치적인 측면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이나 한국 해당 정권의 정치인들은 4년 또는 5년이라는 임기 시간 제약 속에서 결과를 이루어내야 하는 압박이 있

지만 북한 정권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달라서 4,5년 내에 어떠한 변화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설명함.

○ 한국 측 전문가는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나 선제공격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시진핑 주석도 2016년 방중한 리수용 (5월말- 6월초)에게 북한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북한도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함. 중국은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과 원자력 안전 조치(nuclear safety)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으며, 다행인 것은 중국이 북핵이 아태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함.

○ 미국 측 전문가는 유엔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 설명함. 이런 점에서 유엔제재는 북한으로 향하는 물품과 화폐 유통 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함. 또한 비록 대북 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도, 북한 지도자들이 호의호식 하는 데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통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한국 측 전문가는 대북제재가 민생에 영향을 주었을 때 이것이 '나쁜 미국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다'라는 여론을 형성하여 오히려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일종의 일체감 (sense of unity)과 단결을 불러오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우려함.

- 미국 측 전문가는 무역 제한을 통한 제재에는 한계가 있고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한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데에 반해 북한으로 현금을 흘려보내는 중국 은행들에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효과성이 커질 것이라 제안함. 이는 이란 제재에서도 사용되었던 방법으로 해당 은행들이 북한으로 돈을 송금하면서 얻는 수수료와 국제 금융체제속에 남으면서 얻는 이익 둘 중에서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면 그들의 이성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함.

(3) 북한경제의 현황

○ 미국 측 참가자는 북한의 경제는 아직도 고전적 소련스타일의 통제경제 (command economy)이며, 그동안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라 주장함. 북한의 농업 분야에서 가족농 실험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북한의 모든 건설 등은 북한정부가 적자 재정 (deficit financing)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중국과의 무역량도 줄어들고 있는 바, 해외노동자들의 송금으로 버티고 있음.

○ 미국 측 참가자는 36년 만에 열린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예상과 달리 시장개혁(market reform)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도 없었다는 것은 그것이 정치적 이유에서든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함이든 북한이 개방경제로 돌아설 계획이 없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함.

○ 한국 측 전문가는 북한경제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양 축이 받쳐주는 경제이며, 이를 準시장경제 (quasi-market economy)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함. 구체적으로 외국 여행자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평양의 현재 모습을 비디오 촬영한 YouTube 동영상 등을 보면, 자동차도 많고 도로 변의 상점들 모습, 사람들의 옷차림도 예전과 크게 차이를 알 수 있음.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책임을 지고 어떤 큰 빌딩이나 새로운 거리 (예컨대,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를 건설할 때, 자재를 계획 하에 생산하여 사용하는 부분과 자재를 시장에서 조달하여 확보하는 부분이 섞여 있음. 이는 고전적 소련스타일의 계획경제가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라 지적함.

- 최근 북중간 무역량 감소해 대해, 다른 전문가는 감소량이 정상범위 내에 속하고 최근 중국 동북부 지역의 경제가 침체기를 보이는 것과 국제적으로 광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것도 역할을 했으리라 짐작되므로 이를 북한 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증거로만 보기에선 무리가 있다고 주장함.

- 또 다른 전문가는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평양에서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을 수 있으나, 평양 이외의 지방에서는 식료품과 기름 가격이 오르는 등 변화가 감지되었음을 지적함.

- 경제 제재가 그것이 의도한 효과를 내려면 중국이 진정으로 그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에 모든 참가자들이 동의했으며 중국이 최근 제안한 투트랙 (비핵화 + 평화협정) 등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데에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의 의견이 모아짐.

제3세션: 한미 동맹

(1) 한미 동맹의 진단

○ 미국 측 전문가는 한미동맹은 아주 양호 (in good shape)하며, 이전에 비해 성숙하여 국민여론의 갑작스런 변화 등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굳건한 상태라고 진단함.

- 한미동맹은 보다 더 글로벌한 영역으로 확장되었음. 한미동맹은 북한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변화, 경제성장 정책, 의료, 심지어 우주 협력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협력은 한미 관계에 있어 그 폭·깊이·탄력 (breadth, depth, and resilience)을 강화하는 추동력을 제공함.

- 한미동맹은 북한의 도발 방지·대응 태세에 공조를 기하는 동시에,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협의를 가짐.

- 동맹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 미국은 금년 말 새로운 지도자를, 그리고 한국은 내년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함. 국내정치에 여러 여파가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서 대북정책, 그리고 중국, 일본, 남중국해 문제 등에 있어서 한미공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을 기해야 함.

○ 다른 미국 측 전문가는 한미동맹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은 왜 미국이 유사시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약속에 의문을 가지고 한미동맹을 신뢰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함.

- 그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의 부상에 우려를 갖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 강한 조치를 취해 미국의 우세함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길 바라지만, 이것은 더 큰 위험만 불러올 뿐 미국의 동맹국들이 취해야할 현명한 전략적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함.

- 미중 사이에 세력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GDP면으로 볼 때 중국이 미중간의 간격이 좁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 군사력, 소프트파워, 기술발

전 등 다른 모든 분야를 볼 때 미국과 중국의 간격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랜 기간 세력전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임. 경제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 발전의 두 배 속도로 중국이 발전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임.

- 이에 대해 한국 측 전문가는 한국이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약속 (commitment)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국내 문제 해결에 사로잡혀 있어 아태지역에서 안보적 빈틈(security vacancy)이 생기게 될 경우를 우려하는 것이라 설명함.

- 또 다른 한국 측 전문가는 한국 측의 우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발언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한국이 북핵으로부터의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도 미국이 재래식 무기로만 대응할 것’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왔을 것이라 함.

- 이에 대해 미국 측 전문가는 오바마 정권은 지난 네 개의 미국 정부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핵병기 현대화 (더 안전하고 믿을만한 상태로)에 쏟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 국민들의 그러한 우려는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함.

○ 한국 측 전문가는 한미동맹이 굳건한 상태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장 위험한 것이 현실만족 (complacency) 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지난 4월 총선결과나 브렉 시트 (Brexit)의 경우를 보아도 기존 기득권세력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고 안타깝게도 한국의 공론영역에서 한미동맹은 기득권세력으로 해석 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함.

- 이에 대해 미국 측 참가자는 현실만족이 위험요소임에는 동의하지만 한미동맹은 지도자들 간의 상호이해와 양국 국민들의 강한 지지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앞으로 크게 걱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그러나 미국이 한국 국민들을 안심 (reassure) 시키고 약속 (commitment)에 대한 신뢰를 주는 일에 더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함.

○ 최근 트럼프 후보의 발언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비용분담 (burden sharing) 문제에 있어서도 참가자들의 의견 교환이 있었음.

- 참가자들은 트럼프 후보나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해도 상대편 후보 지지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된다는 것에 의견을 같

이 하고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방위비 분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함.

- 이에 한국 측 전문가는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상이 이뤄진다면 협상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잘 진행되도록 한국정부가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한국 측 전문가들은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지금까지 조심스러운 (cautious) 태도를 견지한 것은 사실이나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측면에서라도 한-미-일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음.

- 한 한국 측 참가자는 한미일3자 군사협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한국도 자립형 군사력(self-standing military capability, 즉 OPCON)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주니어 파트너로 남아있는 한 한-미-일3자 군사협력 체제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 주장함.

- 한-미-일 삼자안보협력 체제가 북한만을 상대로 한 것인지 더 나아가 중국의 부상에 맞서는 협력체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됨.

- 미국 측 전문가는 클린턴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현 오바마 정부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 예측함.

- 한국 측 전문가는 국제회의에 가보면 한국 측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과연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반해 미국 측 전문가들은 한국이 과연 남중국해 문제에 관여할 의지가 있는지에 의구심을 품는다고 지적함.

- 한국 측 전문가는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써 북-중간 분열을 피하는 전략을 취해왔다고 밝히고 한국에게는 어쩔 수 없이 북한이 중국보다 중요한 전략적 우선순위라고 함.

○ 미국 측 전문가는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다고 말하고 차기 대선 주자 중 누구하나 자유무역을 크게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우려되기는 하나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 내다봄.

- 다른 미국 측 전문가도 대선과 관련하여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한 가지 안심되는 부분은 힐러리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고) 이는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경험 많고 좋은 실적 (good track record)을 가진 이들로 구성된, 다른 어느 정권보다도 예측가능한 정권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함.

(2) 한미의 대북 정책

○ 미국 측 전문가는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인 바, 북한에 대한 강경입장은 지속될 것으로 봄. 이에 미국과 한국은 현재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판단함.

○ 미국 측 전문가는 한미관계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임을 명시하며 이는 한미 간 대북정책에 대한 엇박자로 한미관계가 훼손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미국도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함의함.

- 한미 양국은 북한과 대화국면에 들어서게 될 경우를 대비해 협상테이블에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갈 것인지 (예를 들어, OPCON, 한미합동군사훈련,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에 대해 양국 고위층간 구체적이고 진솔한 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북한은 아직 협상테이블로 나올 준비가 안되었더라도 우리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의 긴급상황 (contingency) 대비방안에 대해서도 한미 간의 긴밀하고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다수가 동의하였으며 한 참가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미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에 존재하는 대량파괴무기(WMD)를 통제하는 것이겠지만 한국은 많은 위협요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일의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안정 상태를 유지하느냐 두 가지 옵션을 놓고 선택해야하는 큰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 설명하며, 북한의 긴급 상황 대비 뿐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합의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한국 측 참가자는 한국은 북한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에 개입하려는 강한 의도 (strong intention)가 있을 것임에 반해 미국이 이에 협조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하며 한국은 개입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북한 긴급 상황 대비방안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한-중-미 3자간의 대화와 의견 교환도 있어야 한다고 말함.

○ 미국 측 참가자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 시기의 대북정책이 현재의 전략적 인내를 기조로 한 정책의 연장선(what we've done)이 될 것이라고 내다 봄.

-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 정책에 대하여, 미국 측 인사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방기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은 비판임. 미국의 대북정책이 지금까지 북핵문제 해결에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이 외에 가능한 더 좋은 옵션(better option)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 전략적 인내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아직 이름. 또한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간과되었던 인권문제, 북핵비확산노력, 북핵억지방안, 사이버보안 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노력과 성과를 무시할 수 없음.

-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하는 제재 수위나 중국의 공조와 참여는 10년 전 6자회담이 진행될 때만 해도 상상도 못할만한 성과임.

○ 미국 측 전문가가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국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미국이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다섯 국가(P5) 뿐이며 인도나 파키스탄도 실질적으로 핵보유 하고 있지만 이들도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이 고려하는 선택의 옵션이 아니라고 설명함.

(3) 한미 국내 정치

○ 미국 측 전문가들은 미국 정치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함. 비록 클린턴 후보의 전망을 우세하게 보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정말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으며 특히 그동안 언론이 그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동의함.

- 한 미국 측 전문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게 정치적 외교적 자문을 해 줄 측근 인사들이 누가 될지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함.

○ 한국 측 전문가는 현 박근혜 정부가 안보 영역에 있어 국론을 어느 정도 통일시키고 북한문제에 있어 정치적 양극화를 어느 정도 해소시킨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젊은 층들도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하여는 불만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큰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함.

(4) 사드 (THAAD) 배치 문제

* 본 포럼은 사드 배치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개최됨. 본 포럼을 마친 후 약10일 후에 한미는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함.

○ 한국 측 전문가는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미국의 동북아 MD 건설의 서곡(prelude)으로 받아드리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또 다른 한국 측 전문가는 중국이 이를 단순한 서곡이 아닌 중국의 미사일 시설들에 대한 코앞에 닥친 위협(imminent threat)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함.

- 한국 측 전문가는 중국이 2차 보복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미사일 전략에 있어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진단함. 또한 남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사드배치가 진행될 경우 남한이 중국의 무역보복에 취약함을 설명함.

- 이에 대해 미국 측 전문가는 중국이 2차 보복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한국의 대중경제 의존도는 중국의 대미경제 의존도와 비슷한 정도이고 중국은 미국의 경제보복에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경제보복을 너무 과장되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함.

- 한국 측 전문가들은 무역은 상호의존도 관계이기 때문에 괜참을 수도 있으나, 중국 회사들의 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함께 개진함.

□

작성자: 이성현 · 김성철 연구위원

기록자: 이지은 연구원